

배포 일시	2022. 8. 30.(화)			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	주거복지정책과	책임자	과장	이익진 (044-201-4504)
			담당자	서기관	오한영 (044-201-4506)
		공공주택정책과	책임자	과장	이소영 (044-201-4539)
			담당자	사무관	안종구 (044-201-4519)
		주거복지지원과	책임자	과장	이중기 (044-201-4530)
			담당자	서기관	최영록 (044-201-3358)
	재정담당반	책임자	과장	오원만 (044-201-3238)	
		담당자	서기관	김지혜 (044-201-3240)	
	주택기금과	책임자	과장	정진훈 (044-201-3337)	
		담당자	사무관	배기훈 (044-201-3339)	
	기획재정부	국토교통예산과	책임자	과장	남동오 (044-215-7330)
			담당자	사무관	장준희 (044-215-7342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		

## 공공임대주택의 질적향상과 비정상거처 가구 지원 등 취약계층의 주거상황에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.

### < 보도 내용 >

- ◆ 반지하 비극 얼마나 됐다고.. 공공임대 예산 5조원대 ‘싹둑’(한겨레, 8.30)
- ◆ [2023년 예산안] 저소득층 위한 주택도시기금 ‘증발’(아시아경제, 8.30)
  - 공공임대 주택 관련 정부 예산안이 작년 대비 5조 6천억원 이상 감액되고,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관련 예산 삭감

### <국토교통부, 기획재정부 입장>

- 주택기금 예산 감소는 공공전세 한시사업 종료와 영구·국민·행복주택 투자 등 건설형 임대주택 물량의 자연적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, 청년 원가·역세권 첫 집 주택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한 것이 아닙니다.
- 전세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‘21~ ‘22년 한시 도입된 공공전세 사업이 내년도부터 종료됨에 따라 약 1조 9천억원이 줄어들었으며,

- 영구·국민·행복주택 감액분 약 1조 7천억원은 수요자 친화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'21년부터 통합공공임대 주택으로 유형을 통합하면서 더 이상 신규 공급물량이 없어 자연스럽게 감소하였습니다.
- 새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확충하면서도 주거복지의 질적 향상에 보다 중점을 두었습니다.
  - 이에 금년 정부안에 건설형 주택 지원단가 상향(7%), 공급평형 확대(17.2→ 20.2평)를 위한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으며,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분양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.
  - 매입임대, 전세임대도 세대별 지원단가를 상당폭 인상\*하여 저소득층, 사회 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안정된 주거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하였습니다.
    - \* 매입 : (일반) 1.4억 → 1.6억, (신혼부부) 1.7억 → 2억, (다자녀) 1.7억 → 1.95억
    - 전세 : (일반) 0.83억 → 0.93억, (신혼부부) 0.9억 → 1억, (다자녀) 1.02억 → 1.22억
- 또한, 최근 반지하 비극 등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주비용, 정착지원 등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.
  - 이사비 40만원 지원 및 이주보증금 최대 5천만원 지원을 신설하였으며,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 5천호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전세·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.
  - 이와 함께, 정상거처 이주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·돌봄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 배치도 신규 지원합니다.
- 이외에도 저소득층 등을 위한 임차료 보조, 주택수선 지원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예산을 전년 대비 3,800억원 증액하는 등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
  - 전세사기 피해 예방·지원, 층간소음 방지 등 국민 수요에 부응한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.

- 정부는 앞으로도 국정목표에 따라 임대주택 50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 하면서,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투자해나갈 계획입니다.

